

# 가축 전염병과의 사투...농민·방역 요원 '병나겠네'

## 르포-전남 방역현장 가보니

무안군 일로읍 일대는 오가는 이 없이 고요한 정적만 흘렀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10일 만난 일로읍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이동제한 금지구역이 되면서 이웃집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고 푸념했다. 렘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확산해 무안군 일대가 방역대로 설정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AI 방역대까지 설정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19 때보다 더하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무안군 일로읍의 한 오리농가(오리 1만 6000여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고흥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 겨울 첫 AI가 발생한 지 이틀만이다.

방역당국은 무안군의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들과 반경 500m 내에 있는 양계농장의 닭 8만여마리 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소독 작업을 했다.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방역대 내 가금류는 출하만 가능하고 입식이 제한됐으며, 5일에 한 번씩 가금류 AI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장 관계자의 차량은

고흥 이어 무안서에도 AI 확산...렘피스킨병 두 달째 이어져 전남도 방역 인력 정원 밀돌아...담당자 끌어모아 겨우 대처 축산 농가 "이동제한 조치에 옆집도 못가고 경제적 타격" 한숨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 위치를 확인하며 농장 출입 시 소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성진(78) 한국오리협회 무안군지부장은 "오리 농가들이 모두 죽을 지경이다. 한 번 AI가 터져서 살처분까지 한 농가는 AI가 잠잠해질 때까지 수년이 지나도 입식을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며 "오리를 새로 키우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며 살처분 보상비까지 낮추려 한다는 말까지 들어온 농가가 AI 확산을 막으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축산농가들도 반복되는 이동 제한 조치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무안군과 신안군 666개 한우 농가, 무안군 47개 닭·오리 농가, 고흥군 10개 닭·오리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무안군 일로읍에서 20여년째 오리를 키우고 있는 박성진(47)씨는 "우리 농장과 불과 3km 거리에

서 AI가 발생했다. 우리 농장에서는 다행히 확진 사례가 없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크다"며 "사람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농가나 타지로 돌아다니기도 꺼려진다. 요즘은 이틀에 한번 꼴로 농장 주변 눈발에까지 소독약을 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시호 전국한우협회 무안군지부장은 "사육장은 계속 오르는데 판로는 막히고 이동제한조치까지 이어지니 축산농가가 고사위기에 몰렸다.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방역 요원들은 "지난 10월 말 발생한 렘피스킨 방역대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AI가 발생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방역요원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날로 줄어 방역 인력조차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 업무 하중이 더하다는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전남도



10일 무안군 망운면의 한 축산농가 일대가 방역 조치가 내려진 이후 오가는 이 없이 한적하다.

본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남도본부 방역직원은 정원 74명이나 현원은 68명뿐이다.

각종 가축질병 확산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규 채용 직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방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본부는 지난 2019년 26명, 2020년 6명, 2021년 8명, 2022년 5명의 방역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역본부는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인근 시·군 지자체 공수의, 방역업무 담당자 등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겨우 한 고비씩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정비할 시간조차 갖추지 못했는데 연속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방역직원 충원과 이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수학 1등급 대부분 이과생...정시 '이과 침공' 변수

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 11점...과목 유불리 심화 우려

'문과' 학생들의 대학 정시지원에서 '이과' 수험생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1~3등급 받은 학생 대부분이 이과생들이어서 이른바 '교차지원'으로 인한 '문과침공'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1등급 수험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9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3.5%에 불과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에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86.0%, 지난해에는 81.4%였는데 올해는 사실상 1등급을 이들이 점령했다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이다. 수학 2등급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가 71.7%, 3등급에서도 71.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확률과 통계의 경우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미적분은 까다롭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 가장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능에서 킬러 문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학 영역 22번(4점)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번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이번 수능 선택과목간 점수차를 분석한 결과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확률과 통계(137점)보다 11점 더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같은 과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의 표준점수가 문과생이 선호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훨씬 높아

면서 이과생의 표준점수 고득점에 유리해졌다고 해석된다.

올해 수능 수학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 100점이 미적분이 88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미적분을 택할 경우 서너 문제를 틀리더라도 확률과 통계 만점자만큼의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 공통과목에서 자연계열 수험생과 문과 수험생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학 정시지원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차지원은 특정대학, 최상위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1,2,3등급 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교육청, 14일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대비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주시 서구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1층)에서 2024 수능 실재점 결과분석 진학설명회를 진행한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교사들이 참석해 수능 실제

점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시 대비 진학 지도 방법 등을 안내한다.

수도권, 호남권, 전문대, 교대, 의·치대 등 권역과 학교급별, 학교별로 정시 진학방향을 설명한다.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에 관심 있는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일제 강제동원 손배 2차 소송 21일 대법원 선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9년 10개월만에 내려진다. 1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양영수·심선애씨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8년 12월 승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쓰

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다. 그동안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 7월, 양영수 할머니는 지난 5월, 심선에 할머니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2015년 2월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199엔을 받은 바 있다. 배상금이 아닐뿐더러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다민 기자 kdi@

## 유신 비판 신문 제작 옥살이 '정신적 피해' 인정

1970년대 전국 최초로 유신(維新)에 저항하기 위해 '함성'(喊聲)·'고발'지를 제작·배포해 체포·구금된 고(故) 이항(1955~2019)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이씨의 유족 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총 2억 33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광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중이던 이씨는 전남대생인 첫째형 이강씨와 고(故) 김남주 시인과 함께 유신체제를 고발하는 일명 지하신문인 '함성'지 400여부를 제작했다.

이듬 해인 1973년에는 함성에 이어 전국 대학

에 뿌릴 '고발'지의 제작·배포에도 참여했다.

이씨는 경찰에 불합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89일 동안 구금됐다.

이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강요로 자수서 등을 작성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가족들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이씨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